

## 대학의 자율성과 개방성

朴 興 壽  
(延世大 新聞放送學科)

다양성의 수용과 자율성의 제고를 통한 개방성의 확보, 그리고 수동적인 배움이 아닌 능동적·상호적 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는 세계에의 적응만이 아닌,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에 확고히 서기 위해서 열린 교육 즉 교육의 개방성은 시급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 교육 현실의 선결과제다.

### I. 머리말

열려 있는 사회는 살아 있는 사회다. 열려 있어야만 생동하는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유기체로서의 인간, 인간이 모여서 형성되는 사회의 제반 조직,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현장에도 적용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양분을 섭취해야만 스스로를 유지하고 존속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 알려진 것처럼, 인간의 중추 신경계통의 존재 이유도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여기서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용·분석하여 그것을 행동 조절의 지침으로 사용한다” 함은 바로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외부 환경에 대해 열려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에 대한 논리를 확장시켜 보면 그것은 곧 조직체로서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 사회가 정보를 수용하는 통로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면, 환경 적응에의 지침을 제공하는 정보는 점차 감소해서, 그 사회는 결국 침체되고 경직되어 조직체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세계의 환경은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한 발전 내용과 고도의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상호의존적 발전 양식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3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와 지식 체계에 둔감한 사회에 있어서는, 발전이란 기대조차 할 수 없으며 그 사회의 유지·존속조차 불투명해질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열려 있는 사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사회의 개방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

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본고에서는 사회형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육의 개방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회가 환경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 해도, 그 구성원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용시키는 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회의 개방성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이 사회 개방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개방성이 선행될 때 사회의 개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교육의 개방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Ⅱ. 교육의 개방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존재함과 동시에 배우기 시작했으며 배운 것을 서로 교환했다. 서로 다른 집단간에 교환된 지식과 정보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그것들과 융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으로 창출되었고, 새롭게 창출된 지식과 정보는 그 집단의 후예들에게 전수되면서 전통과 문화를 축적시키고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인간 문화의 기본적인 맥락이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 즉 횡단적 흐름인 교환과 종단적 흐름인 전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방성을 살펴보자.

교환은 이미 개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개방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교환의 주체가 유동적 다수이며 그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환 주체자들의 의지가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교환의 본질적인 개방성은 구현되지 못한다.

지식과 정보의 전수라는 측면에서는 먼저 전수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외에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폭이 넓고 다양해

야 한다. 한 사회의 모든 것이 세대를 통해 계승되려면 의무적으로 전수되어야 할 것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전수받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과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전수에 있어서의 개방성은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정보의 전수란 모방 또는 답습에의 강요가 아닌, 미래를 위한 창조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성이란 다양성과 자율성이란 두 가지 차원을 갖는 셈이며, 결국 다양한 논리를 수용하고 자율을 인정하는 것이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방성의 개념이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도라는 것은 그 대상 집단을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제도라면, 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고안해 낸 것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원의 대표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서 그 차선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자율성의 대리적 실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같이 대리적으로 실현되는 자율성이 제도적 측면에서 개방성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제도가 개방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대리적으로 자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제도는 첫째 그 적용 대상 집단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둘째 그 제도의 정착에 앞서 집단 성원들 사이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적용 대상 집단에게 불필요한 제도는 결국 타율적이고 구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되어 버리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는 그 생성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이 대리적 자율성이 최대로 실현될 때에만 가장 개방적인 것이 된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성원이 그 제도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방성은 교육 내용의 다양성에서 확보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선택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것은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특히 이데올로기 교육에 있어서 내용의 다양성은 더욱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제시와 더불어 그 장단점이 충실히 논의될 때에 이데올로기 교육이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정보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추세를 보아도 교육 내용의 다양성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현대 환경에의 적응을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식과 정보의 두 흐름(교환과 전수)을 통해 교육의 개방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적용될 수 있나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던 이러한 개방성 논의가 우리나라 교육 현상에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으며,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대외적 환경의 변화나 제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제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도가 개방성을 결여했던 까닭에 그로 인한 부작용에 의해 수정이 거듭되었던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최대한의 “대리적 자율성의 실현”이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대표들이 입안자로서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입장이나 직접적인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는 그 시초부터 본원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거기에 입안에 이르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채, 그 시행의 홍보에만 주력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쌍방향성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제도 대부분은 그 시작부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채, 시행에서 오는 불만감만을 불러일으키고 그 제도에 대한 지지자나 옹호세력은 소수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빚어 왔던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 자체상의 커다란 결함 때문이 아니라, 교육제도 입안 과정에서 개방성 결여로 인해, 제도 자체가 1년이 멀다 하고 수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해도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 언제나 한 구석에서는 불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민은 최대 다수의 합의와 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순응해야 하며, 또 제도의 실행자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가치 순화의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즉 교육 대상 집단들로 하여금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길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 집단이 가진 필요성을 고려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가치 순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무시된 채 가치 순화만을 강조해서는 결코 그 제도가 지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개방적인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러한 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두 가지 과정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 두 가지 과정이야말로 “대리적 자율성의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 개방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교육개혁 심의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 제시한 그 기본적 과정이 결여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듯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학생들이나 그들의 부모 입장을 크게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그것에 중점을 두고 여론 수렴 작업은 요식적인 공청회로 비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행과정을 무시한 가치 순화 작업에 비중을 두어 이를 통해 지지를 얻고 옹호 계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듯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안된 제도가 개방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개방적이지 못한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폐쇄적인 제도는 그 제도 안에 담긴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고, 중국에는 교육내용의 개방성마저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교육개혁안의 경우만이 아니라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들에게는 정원 증가를 통하여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과 더불어 학부모들에게는 만성적인 과외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골자로 했던 '80년도의 교육개혁에 대해, 현재에 와서는 왜 아무도 옹호를 하려 들지 않고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인내심과 시간을 가지고 "대리적 자율성의 실현"에 우선적인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교육의 내용적 측면의 개방성 역시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제도라는 울타리를 성립시키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 더욱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 안의 내용은 단지 관심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만 실정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개방성은 그것의 다양화를 통해 실현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는 당위개념의 다양성 외에도,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의 개념으로써 다양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논리에 비중을 두어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무시한 채,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을 고수한다면, 그에 의해 길들여진 우리의 학생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감각을 상실하게 될은 물론, 현실로 다가온 국제화시대의 다양한 논리 속에서 소외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교육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앞으로 닥쳐 올 정보화시대, 이미 시작된 국제화시대에 능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감상적인復古주의나 전통주의만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미래를 개척해야 할 사람은 젊은 세대이지 오늘의 기성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태올로지 교육의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 이외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어느 것을 선분리 택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역시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균형 있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그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역시 항상 개발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답습의 형태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히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세대가 어떠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가 정립되지 않은 채 수단만을 수정하는 일은 수단의 계속적인 수정이란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원래 목표의 본질과는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서의 함양과 지식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과목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격히 변동하는 현대에서는 가치체계의 변화 역시 쉽게 일어나는 까닭에, 지속적인 정서의 함양 없이는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걸려서야 변하던 도덕이나 규범 혹은 가치체계가 몇 년 혹은 수개월 사이에도 변할 수 있는 현대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겪게 될 충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부언하고 싶은 것은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명히 구분하여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토착화라는 명분 아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여러 학문의 분야에서 교육 당사자는 물론 피교육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물론 학문이 가지는 시대적·사회적 특수성이란 배제해서도 안 되고,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문의 보

편성을 경시하거나 부정한다면, 중국에는 학문의 발전마저도 저해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문 분야에서 강조되는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과학 분야에서보다 높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인문 분야의 특수성과 과학 분야의 보편성을 혼동하는 경향 역시 불식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개방성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은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으로나 모두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심각한 결과와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기서 열린 교육·교육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탐색적 방안을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에서 제시해 봄으로써 본고를 맺고자 한다. 그러나 제시될 방안은 단지 개방성을 얻기 위한 시도를 시험해 보려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시안에 불과하며 하나의 바람직한 제안이다. 또 이것으로 인해 교육의 개방성이 완벽히 성취된다고 확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 IV. 제안 및 결론

우선 국내적으로는 대학별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개체적인 특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개별적이고 다양한 학풍 조성의 문제로부터 입학과 졸업 등의 행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어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규격화된 능력은 변화하는 제반 사회 여건에의 적응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닦쳐오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응용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성이 있어야만 교육 현장에서의 참여 의식이 고취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대학이 그 본래의 목적과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커다란 소득이 될 것이다.

다양보다는 획일적인 사고에, 그리고 자율에 앞서 타율에 익숙해져 있어 그것만이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과감히 탈피할 때, 비로소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리게 된다. 1945년을 기점으로 할 때, 현재의 기성세대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길들여진 가치와 생활 규범을 새로운 세대에 일방적으로 전수하려 한다면, 열린 교육은 요원해질 것이며 따라서 열린 사회 또한 이룩될 수 없음이 확실하다. 결국 필자의 제안은 교육의 존재 양식을 다양하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변해 가는 학문의 물질속에서 학원 스스로가 순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학생과 교수의 교류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인 학문의 조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을 불러들이고 ‘우리의 것’을 가르침으로써 능동적인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배워 온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이미 낡은 구시대적인 습관에 불과할 뿐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교류, 그것만이 오늘의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 학문수입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과감히 학문수출적인, 아니면 적어도 학문호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그야말로 학문의 선진화를 이루는 기틀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다양성의 수용과 자율성의 제고를 통한 개방성의 확보, 그리고 수동적인 배움이 아닌 능동적·상호적 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는 세계에의 적응만이 아닌,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에 확고히 서기 위해서 열린 교육—교육의 개방성은 시급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 교육 현실의 선결과제다.

그로 인해 도래될 성숙된 열린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의 개방성 논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